

종교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종교가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배은총** · 김수완*** · 안상훈****

요약

이 연구는 복지국가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종교'의 영향을 타진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연구의 주안점은 복지의 국가책임에 대한 개인의 복지 태도에 종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모아진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종교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규명코자 한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종교가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 이해적 관점과 가치 규범적 관점의 두 가지 차원에서 타진하였다. 분석적으로는 국제사회인식조사자료(2016)를 이용하여 거시적·미시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다층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는 개인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 국가 주도적 복지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균열을 가져오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종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사회와 개인일수록, 국가 주도적 복지를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 지위의 차원에서 복지제공자, 복지부담자, 복지수급자로서 개인은 종교와 국가 간에 상충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며, 기능주의적으로 종교와 국가 간에 복지에 대한 상충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신교와 구교의 가치 모두 국가 중심주의와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신교 중에서도 루터교와 칼뱅주의 간에 국가의 역할과 자본주의에 대한 가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복지국가 유형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요어: 종교, 복지인식, 복지국가, 복지지위, 다층분석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1037707).

** 주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로 (favor1216@snu.ac.kr)

*** 교신저자,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soowankim@hanmail.net)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hoonco@snu.ac.kr)

1. 서론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기존에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종교'의 영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적 논의를 지향한다. 논의의 주안점은 '복지의 국가책임에 대한 개인의 복지 태도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종교가 복지국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¹⁾

이제까지 복지국가를 종교와 연결해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종교는 산업화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잃어 왔다. 이로 인해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종교는 주목받을만한 대상이 아닌 것처럼 치부되어왔다. 두 번째 이유는 종교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연구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는 개인의 삶이나 사회에 하나의 문화로서 스며들어 그 영향력이 다차원적으로 발현된다. 종교의 이러한 추상적 영향력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포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분석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종교는 복지국가 연구의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이러한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종교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의 함의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주류적 연구들이 주로 산업화나 좌파정치에 천착하고 있긴 하지만 종교의 역할을 타진한 연구도 간간히 이루어져 왔다.²⁾ 복지국가와 직접 관련이 없긴 하지만, 막스 베버(Max Weber)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후 종교와 자본주의의 연관성은 현대 사회과학의 고전적인 주제로 여겨진다.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수정의 대표적 표현형이라 한다면 막스 베버의 진단을 복지국가와 연결하는 일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다.

이 연구는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종교의 힘과 영향이 정치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소수파 연구에 기반을 두는 한편, 복지국가에 대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최근의 학술적 접근법이나 가치(value)를 중시하는 도덕 경제(moral economy)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예컨대 복지국가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복지국가의 가치적 맥락과 사상적 전통에 주목하여,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혹은 유교주의의 사상이 어떻게 각국의 복지국가의 정당정치와 사회정책에 가치적 토대가 되어 복지국가의 특성을 형성하는지를 설명하고

1) 민주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종교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태도를 거쳐 종교적으로는 개인들의 정치적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Ahn(2000)을 참조하라.

2) 예컨대,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0)의 각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로서의 복지국가 분기에 관한 설명, 캐슬스(Castles, 1994, 1995, 1998)의 한 사회의 복지정책 발전에 그 사회의 종교적 구성과 특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 한다(Van Oorschot, Opielka, and Pfau-Effinger, 2008; Jones, 1990). 또한, 복지국가의 '도덕 경제(moral economy)' 접근에서는 각 개인은 자기에 대한 혜택 정도와 이해관계보다는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정의 등에 대한 고려에 따라 복지국가의 제도를 평가한다고 본다(Mau, 2003).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종교를 믿는 개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종교 교리는 신자들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선호(preference)를 결정할 공산이 크다.

이처럼 문화적 측면과 가치의 중요성의 맥락에서 종교를 주요한 정치적 균열(political cleavages)로 주목하는 관점은 복지국가의 가치적 균열을 설명하려는 대안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개인의 태도나 인식을 설명했던 기존의 주류적 접근은 계급 중심적 논의를 필두로 한 자기 이해(self-interest) 기반의 균열이었다. 이러한 기존 논의들은 그 설명력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적 균열(value-related cleavages)을 간과했다는 흠결을 내포한다. 사실상, 복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좌파와 우파로 나뉘는 경제 결정론적 결정이나 시장 메커니즘에서의 득실을 따지는 이해 타산적 성격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누가 무엇을 왜 얻어야 하는가'(who should get what and why)라는 윤리적인 동시에 규범적이기도 한 질문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복지정치의 균열을 설명하는 요소로서 고려할 가치가 크다(조남경, 2013; Van Oorschot, 2000).

복지국가와 종교의 관계는 다차원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거시차원에서 종교는 복지국가의 문화적 배경이자 가치적 토대로서 기능해왔다. 오펠라(Opielka, 2008)는 복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매우 중요한 문화적 토대로 작동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가톨릭의 보충성(subsidiarity)의 원칙은 국가개입을 정당화한다.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시장의 결과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는 노동자의 사회권과 해방을 주장한 사회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와 구분된다. 빈자를 도울 의무와 안정적이고 공평한 사회질서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모든 기독교 종파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가톨릭의 전통적 교리에 그 뿌리를 둔다(Manow & Van Kersbergen, 2009). 이런 사실은 캐슬스(Castles, 1994)의 연구에서 더욱 명시적으로 밝혀졌었는데, 종교와 세속화 정도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정치적 요인의 영향 못지않게 사회정책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복지국가의 정치에서 보자면 미시적 차원에서의 종교의 영향력도 거시적 차원 못지않게 중요하다. 종교는 개인들의 가치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복지국가에 관한 태도에 정치적 균열을 파생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Flora, Kuhnle & Urwin, 1999). 종교적 균열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이해관계 균열이 직접적이지 않은 분야, 예컨대 아동이나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정책과 관련한 핵심적 균열이라 여겨진다(Alber, 1995; Manow,

2004에서 재인용). 종교는 ‘국가가 개인들의 복지에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 ‘빈곤과 불평등 등 사회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같은 복지국가의 주요 이슈들에 있어서 이제까지 주로 언급되어 온 계급, 성, 세대, 노동시장 지위 등과는 구별되는 균열을 가져오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종교가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를 결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교조직들은 정치적 세력화를 이루는 정치적 행위자로서 작동해왔다. 권력자원론에서는 복지국가의 발전이 전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세력 혹은 노조를 통한 노동자의 동원(mobilization)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지확대에 있어 기독교민주주의 정당들의 역할도 상당했다. 특히 이들은 경제적 풍요기의 복지국가 확대에서는 사회민주주의와 기능적으로 동등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관찰들이 있다(Schmidt, 1980, 1982; Manow & Van Kersbergen, 2009에서 재인용). 혹자는 한발 더 나아가 가톨릭주의가 복지국가주의(welfare-statism)에 있어 좌파세력보다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Wilensky, 1981). 복지국가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 실제로 가톨릭이 가톨릭 노동자들에게 기독교민주당을 지지하도록 동원하는데 직접 나서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Manow, 2004).

넷째, 종교는 종교집단과 조직을 통해 제3 섹터에서의 중요한 복지 공급 주체로 기능해왔다. 전통적으로 주요 종교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선적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자선 활동의 실천적 공간을 제공해 왔다(Hodgkinson, 1990: 292; Wuthnow, 1991; 강철희 외,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종교의 역할설정은 복지국가와 때로는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때로는 보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복지국가 확대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직접적 복지 제공이 주가 되었던 국가들에서의 경우, 종교기반의 민간복지부문은 공공부문과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국가복지 위주의 시대가 가고 제3의 길로 일컬어지는 복지 다원주의와 민영화의 시대가 되자, 종교에 기반을 둔 복지 제공 주체들의 역할은 국가복지의 보완재로서 다시금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복지국가에서 종교의 역할은 다차원적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복지 인식에 대한 종교의 영향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³⁾ 종교처럼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속성을 가진 ‘문화’의 영향력을 계량적으로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종교와 관련된 개인의 가치관(value) 또는 태도(attitude)에 관한 기존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한편, 개인의 인식에는 자신을 둘러싼 문화의 영향력이 반영되며, 이것이 인식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미시분석을 통해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다(조남경,

3) 물론, 방법론적으로는 거시적 변인을 고려한 상태에서 미시적 종교관련 균열의 영향이 평가될 것이다. 하지만, 논의의 중심은 미시적 부분이다.

2013). 또한, 개인들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는 각 사회가 담지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성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점도 있다. 복지태도의 균열지점을 파악함으로써 복지 담론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 및 세력 간의 동맹 가능성을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Ahn, 2000). 요컨대, 종교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영향력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만만치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복지 인식을 측정하는 다양한 대안적 질문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질문, '복지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연구는 종교와 복지국가의 관계를 미시적 인식에 관한 계량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장 크지만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의 연구전략으로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각 국가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복지 제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이 시도한 복지국가 유형화에서도 이런 사실이 잘 설명되어 있다. 사민주의 유형의 국가에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가장 크다. 보수주의 유형의 국가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가족 및 기존 공동체의 기능이 강하게 남아 있다.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에서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작고 민간과 시장의 역할이 크다. 이에 주로 사민·보수주의 국가는 평등을 추구하는 큰 복지국가로 구분되는 한편, 자유주의 국가는 자유를 더 중시하는 작은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것이다. 기존의 복지국가 연구에서 제기하는 이러한 국가 간 차이, 즉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의 정도에 대한 설명은 주로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 Theory)⁴⁾과 같은 계급 중심 이론이나, 성(Skocpol, 1992), 이익집단, 복지지위 등의 탈계급적 요인들에 주목한 이론들(Ahn, 2000)에 의해 설명되어왔을 뿐, 기존 연구들에서 종교와 관련된 균열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앞서 논의한 바처럼, 적어도 서구 국가들의 문화적 토대형성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기독교 역사와 문화는 서구 국가들의 사회제도에 깊이 스며들었으며, 개인들의 삶과 가치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종교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컸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데 성공적이기도 하다. 복지국가의 발달과 성격 형성에 있어서 종교는 종교적 가치의 견지를 통해서 혹은 현실정치에서의 실질적 영향력 발휘를

4) 정치적 맥락에서 복지 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권력자원론은 민주주의의 발달로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력자원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권력자원을 분배시키는 복지정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Korpi, 1983). 이 이론에 기초한 복지국가 설명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력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와 국가 내 정치적 동맹(연대)에 따라 복지국가의 발달 정도와 양상이 결정된다(Esping-Andersen, 1990; Korpi & Palm, 1998).

통해서 계급정치에 필적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기독교 종파 간의 차이에 관한 내용 또한 이 연구의 관심사 중 하나여야 할 것인데,⁵⁾ 종교 분파에 따라 국가를 대하는 태도나 복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던 것으로 보고된다(Castles, 1998). 종교개혁을 통해 구교(Catholic)와 신교(Protestant)가 분리된 이후 형성된 국가 간 종파 차이는 복지국가의 차이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종교는 기존의 균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혹은 기존 균열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리라 기대된다. 예컨대, 종교 유무나 종교 분파에 따라 복지국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리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들의 종교와 복지국가를 대하는 태도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먼저, 개인의 종교 유무, 국가의 세속화 정도, 그리고 가톨릭과 신교 등 종교 분파 등에 따라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성 인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이론상의 가설들이 실제 자료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것이다. 종교와 복지국가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복지국가에 관한 대안적 논의를 이으면서 이론적인 면에서 정교화를 시도하고 실증적인 분석에서 정밀성을 담보하려는 시도이며, 그러한 점에서 함의를 확보한다고 하겠다.

2. 이론적 논의

1) 종교와 복지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일반적인 개인의 복지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왔다(김사현, 2009; 백정미·주은선·김은지, 2008; Lasen, 2008; Andreß & Heien, 2001; Arts & Gelissen, 2001; Bonoli, 2000; Papadakis & Bean, 1993; Svallfors, 1997; Bean & Papadakis, 1998). 이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미시적 접근으로는 자기 이익(self-interest) 관점이나 정치 이데올로기 관점, 계급 관점⁶⁾ 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 내의 복지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연구가 있다(Jaeger, 2006). 두 번째는 거시적 접근으로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복지국가 체제를 중심으로 국가복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이미 상당 부분 구조적으로 제약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연구들이 그것이다. 한편, 이에 대응하여 거시적 제도와 미시적 행위를 연계하려는 시도

5) 이 점은 막스 베버의 고전적 연구만 봐도 고려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6) 계급 이론에 따르면 계급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정치적 선호를 강하게 규정한다. 특히 최근 계급 이론은 후기산업사회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계급체계를 제안한다(Häusermann & Schwander, 2009; Oesch, 2003, 2006; Kitschelt & Rehm, 2006).

도 있는데, 복지지위론이 대표적이다(Ahn & Kim, 2015; 안상훈, 2000, 2002; Ahn, 2000). 복지 지위론에서는 각 개인의 자기 이익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복지제도 자체에서 파생되는 이해 관계와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제도주의적 맥락과 개인행위 간의 연결고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들 세 종류의 연구 경향들 모두에서 종교라는 균열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주류적 논의에서 벗어난 것들로 종교와 복지 인식을 다룬 연구들도 일부 존재한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타인의 복지에 대해 관심과 책임감을 지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자선적 기부 또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Brooks 2005; Bekkers & Wiepking 2006; Wilhelm, Rooney & Tempel, 2007). 또한 종교성(religiosity)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높은 연대성(solidarity)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Oorschot, 2006; Arts, Halman & Van Oorschot, 2003). 대표적으로 오스콧(Van Oorschot, 2006)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인·실업자·이민자·장애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강한 연대적 태도를 갖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특성이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국가 주도적인 복지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Scheve & Stasavage, 2006; De La O & Rodden, 2008; Gerxhani & Koster, 2012). 일단 개인적인 차원에서, 종교는 개인의 삶에서 주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기능하며 여러 사건으로부터 하나의 ‘완충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종교 외적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공유(risk-sharing)하자는 국가복지에 대한 필요나 선호가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Scheve & Stasavage, 2006; Gerxhani & Koster, 2012). 필요 맥락에서의 선호를 넘어선 경쟁의 맥락에서의 선호에 관한 논의도 가능하다. 기존에 종교가 큰 역할을 담지하던 교육 및 복지 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커질 경우를 생각해보자. 종교는 이를 교회의 영향력에 대한 위협으로 느낄 공산이 있다. 이에, 종교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종교와 국가를 경쟁적 관계로 인식하여 작은 정부를 선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De La O & Rodden, 2008).

분석 자료에 따라 살펴보면,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 재분배 선호를 분석한 일부 연구(Thewissen & Rueda, 2019; Finseraas, 2008; Stegmuller, 2011)에서도 종교성이 재분배 선호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국제사회인식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복지 지출 선호나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들(VanHeuvelen, 2014; Scheve & Stasavage, 2006; Kitschelt & Rehm, 2006)이나, 유럽가치조사(European Value Study)를 활용한 최근 연구(Carriero, Filandri & Molteni, 2017)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종교성이 국가의 복

지 지출과 책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배은총(2014)도 국제사회인식조사(2006)를 이용하여 종교가 국가의 복지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신교는 국가복지책임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반면, 구교 및 기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개인의 종교 활동 참여도나 국가 단위의 세속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종교와 복지인식에 대한 기존의 개인단위 연구들의 공통점은 명백하다. 종교가 있거나 종교 성이 강한 개인일수록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국가 주도적인 복지 제공에 대한 지지는 낮게 나타난다는 결론이 그것이다. 한편, 한국에 관한 일부 연구에서는 종교가 국민들의 복지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상은·김희찬(2017)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3차-6차 자료를 활용해 종교와 복지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들 연구에 의하면, 서구 복지국가들은 종교와 복지인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러 가지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복지인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개인의 선호와 결정을 제약하는 거시적 요인을 강조하는 제도주의적 관점을 고려한 경우가 드물다. 국가 요인이 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이는 명백한 허점이 된다. 종교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거시 제도주의와 미시적 행위를 연계하는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는 거시적으로 한 사회의 문화로서 작동할 뿐 아니라 미시적으로 개인의 삶과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념체계이다. 이에 종교가 복지체제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은 미시적인 차원에 집중하는 연구에서도 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⁷⁾

둘째, 종교를 변수목록에 포함한 경우에도 단순한 변수투입을 넘어 종교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갖는 의미를 이론적 견지에서 충분히 포착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종교와 복지국가 간에 존재하는 다차원적인 관계, 혹은 종교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했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각 종교가 지닌 가치규범적 측면에 의한 것인지, 종교가 복지에 대해 갖게 되는 다양한 자기 이해에 의한 것인지 등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적이 없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존 주류적 변수들에 관한 이론적 설명들과 비교하여 종교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의미

7) 예외적으로 배은총(2014)은 다층모형을 통해 종교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미 오래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어 최근 종교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 국가차원에서 복지국가체제와 세속화정도 등을 하나의 모형에 투입하여 다중공선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 이론적인 정교함 등에서 개념적으로나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재고될 측면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배은총의 기존연구를 기반으로 이론적, 방법론적 정밀화를 시도한 작업임을 밝힌다.

부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종교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가 복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원의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한다. 둘째, 거시적 차원의 논의인 제도주의적 관점과 미시적 차원의 논의인 계급적·비계급적 균열에 대한 설명을 통합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조망을 시도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에 조사된 국제사회인식조사자료(2016)를 분석함으로써 최근 변화까지 반영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종교와 복지 인식: 이론적 재구성

이 연구에서는 종교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이해적 차원과 가치규범적 차원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자기이해적 차원은 어떤 종교인지의 내용보다는 종교가 사회 내에서 담당하는 기능주의적 측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종교분파를 막론하고 국가복지에 대한 인식에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가치규범적 차원은 종교가 추구하는 내용적인 가치와 신념에 관련된 것으로서, 각 종교분파에 따라 복지인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담게 된다.

(1) 자기이해적 관점: 종교와 복지지위(welfare status)

종교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이해의 맥락에서 기존의 공공복지에 대한 복지정치를 설명하는 복지지위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복지지위론은 복지정치를 권리와 의무의 복합적인 차원으로 파악하고, 복지관련 이해관계에서 파생되는 세 가지 지위 차원들을 제안한다. 즉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가 그것이다(Ahn, 2000; 안상훈, 2000, 2009).

복지지위론은 애초에 공공복지를 중심으로 한 복지지위에 초점을 두고 제안된 것인데, 이 연구는 종교가 개인의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복지지위를 민간부문 복지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지위론적 특성을 종교를 통한 민간복지 부문으로 확대하면서, ‘복지지위’를 협소하게 해석·적용하여 지위 하나하나에 따른 영향을 정교하게 검증하기 보다는, 미시적 및 거시적 차원 양쪽에 걸쳐서 복지지위론의 전반적인 논리를 자기이해적 차원이라는 큰 틀에서 연결시키고자 한다.⁸⁾

8) 이는 비단 자료에서 각 복지지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변수를 구할 수 없는 변수확보의 한계 때문만은 아니며, 미시적으로 개인의 종교여부 및 종교성, 거시적으로는 세속화 정도라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본 연구에서

먼저,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보자. 한 사람이 공공부문이 아닌 종교 등의 민간부문에서 복지수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은 자신이 보호받는 복지 안전망의 확장이나 축소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한편, 다른 제공주체에 의한 복지 안전망의 확장과 축소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국가복지에 대한 추가적인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복지가 종교복지를 대체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종교로부터 받는 사적 안전망이 강할수록⁹⁾ 국가복지에 대한 지지는 덜 강하게 된다.

두 번째로 복지부담자로서의 지위를 보자. 복지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그 사람이 복지국가를 반대할 가능성은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를 종교와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을 통해 이미 민간부문에 현금과 기부 등을 통해 복지 부담을 많이 하는 개인일수록, 복지를 위한 세금과 기여금 등을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식하거나 기피하고자 하는 공산이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 부담이 전제되는 국가복지에 대한 지지가 낮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세 번째의 복지지위는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이다¹⁰⁾. 종교가 지니는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세속화이론(secularization theory)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다. 세속화이론은 19세기 이후 근대화의 진행과 함께 서구 사회에서 종교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세속화의 요인으로서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국가의 기능이 점차 확장되면서 과거에 종교가 수행하던 사회적 기능이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류대영, 2002; Norris & Inglehart, 2004). 이러한 기능주의적 설명은 복지의 발전과정에도 적용되는데, 복지국가가 태동하기 전까지 '복지'는 잔여적인 차원에서 민간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종교는 지역사회 내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공적영역에서 복지의 이념을 설파하는 기능까지 담당하였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특히 복지국가가 등장하는 20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가 주도적인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복지 제공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은 종교 등 민간으로부터 국가로 이양되기 시작하였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지책임을 수행한 서구 선진 국가에서 종교의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뒤르켐과 같은 기능주의자들은 근대화·산업화와 함께 중세시대에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교육·건강·복지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들이 국가 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제도로 전환되면서, 종교가 갖던 사회 내 역할이 축소되는 것으로 보았다(Norris & Inglehart, 2004).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작은 국가일수록 복지가 국가 주도적으로 제공되어 국가의

자기이해차원에서의 복지지위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려는 취지에 비춰보아 무리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종교기관 복지프로그램 수혜자, 재정부담자, 제공자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연구는 별도의 후속 연구를 통해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9) 실제로 받는 수혜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기대가 큰 경우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10) 기존의 공공부문 중심의 복지지위론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에 대해 복지국가의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복지국가의 축소를 바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안상훈, 2009).

세속화 정도와 복지지출의 규모가 비례한다는 실증적 증거(Scheve & Stasavage, 2006)도 제시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복지제공에 있어서 국가와 종교 간에는 상충적(trade-off)인 관계가 존재한다. 요컨대 전통적인 복지제공주체였던 종교는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둘러싸고 국가와의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며, 집합적인 종교집단의 입장에서 국가복지에 대해 낮은 선호를 보일 수 있다.¹¹⁾

[표 1] 종교와 복지인식: 종교와 관련된 복지지위와 국가복지에 대한 태도

복지지위	종교와 관련된 메커니즘	국가복지에 대한 태도
복지수혜자로서의 지위	종교에 의한 사적 보호망 정도	· [미시적] 종교 있거나 종교성 정도가 높을수록 국가복지에 대해 낮은 선호 · [거시적] 세속화 정도가 낮을수록 국가복지에 대한 낮은 선호
복지부담자로서의 지위	기부와 헌금 등 종교를 통한 복지활동	
복지제공자로서의 지위	복지제공에서 국가와의 경쟁 혹은 대체관계	

요컨대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종교가 국가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복지지위의 메커니즘에서 설명될 수 있다. 종교에 의한 사적 보호망에 의해 보호 받는 복지수혜자, 기부와 헌금 등 종교를 통한 복지부담자, 복지제공에서 국가와의 경쟁 혹은 대체관계에 있는 복지제공자의 지위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미시적으로는 종교를 가진 사람, 특히 종교활동이 활발한 사람일수록,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세속화 정도가 낮을수록 국가복지에 대해 낮은 선호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종교의 가치·규범과 복지국가

자기이해에 관한 복지지위론의 설명은 복지인식에 있어서 종교와 국가복지와의 관계를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상충관계로 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종교의 다차원적인 역동과 종교 간의 다양한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 종교는 가치규범체계로서 특정한 방식의 가치와 신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에 따라 그 사회와 문화, 개인의 인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는 복지국가 혹은 그 유형에 따라 상이했다는 연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기독교 문화권에 속하지만, 대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로마 가톨릭 즉 구교가, 앵글로색슨 국가들에서는 칼뱅주의 등의 개혁신의 신교

11) Ahn(2000)에 의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입장이 달라진다. 같은 맥락에서, 종교는 민간 영역이며 공공부문종사자들이 국가복지를 지지하는 것과 반대방향으로 신자들이나 교회의 입장이 형성될 소지가 다분하다.

가,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신교 중에서도 루터교회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구교와 신교, 또한 신교내의 종파 간 차이가 존재한다(Castles, 1998). 이러한 종교분파 간 차이는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쳤는데, 먼저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은 대륙 유럽 복지국가들의 보수적인 성향, 즉 전통적인 가족과 계층 유지를 중시하는 사회적 규범이 가톨릭 문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캐슬스(Castles, 1998)는 사회 정책에 종교, 특히 구교가 미친 영향에 주목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가톨릭 국가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성격이 강했다. 이에 산업화 시대에 많은 사회문제가 등장하자, 종교나 국가가 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존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다. 가톨릭 국가 내에서도, 국가에 대한 입장에 따라 종교의 역할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가톨릭 국가들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 가톨릭은 중산층 계급을 중심으로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기독교당(12)을 통해 사회적 갈등의 화해와 사회 조화의 유지를 위한 중재정치를 펼치는 등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산업화 이후 자본주의가 가져온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반대하면서 복지국가의 역할을 지지하는 등 큰 영향을 미쳤다(Van Kersbergen, 1995). 반면 프랑스나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의 국가에서는 종교정당의 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들 국가에서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종교의 역할이었던 교육이나 복지 영역에 대한 국가 역할의 확대와 세속화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한편 베버(Weber, 1904)는 신교(Protestantism) 중심의 국가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더 발달한 점에 주목하고, 이를 신교의 교리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예컨대 칼뱅주의는 게으름과 탐욕으로부터의 금욕을 강조하고, 노동과 성실한 직업윤리를 강조함으로써 근대 합리적 자본주의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신교는 기본적으로 서구의 복지국가 발전에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으로 논의된다. 캐슬스(Castles, 1998)는 신교 중심의 국가들은 사회변화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어서, 보수적인 가톨릭 중심 국가와 비교하면 사회변화에 따른 국가의 개입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신교는 개인의 자립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강경한 반국가사회주의(anti-etatism)적 입장을 주장하였기 때문에(Manow, 2004), 개인과 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증가시키는 복지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고도 설명된다.

그러나 신교 내에서도 분파에 따라 복지국가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루터교회(Lutheran Church)의 경우, 영미권 중심의 다른 개혁교회와는 달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

12) 이는 노동자계급 중심으로 계급적 갈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정당과 대비된다.

보장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 반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가와 협력함으로써 복지국가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능한 것으로 평가된다(Manow, 2004; Manow & Van Kersbergen, 2009). 또한 루터교와 칼뱅주의 간에는 빈곤 등의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이하였고, 종교분파 간의 상이한 가치는 각국의 빈곤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즉 칼뱅주의는 빈곤에 처한 자들이 스스로 일을 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루터주의는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모두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Kahl, 2009).

요컨대 종교분파 간에는 국가와 복지에 대한 상이한 가치와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각 국가의 문화와 정치,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분파 간 입장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2]에 정리한 바와 같다.

[표 2] 종교분파 간 국가복지에 대한 입장

종교분파	복지국가와 관련된 가치	국가복지에 대한 입장	해당 국가	
구교	사회 내 갈등 화해, 사회질서 유지 자본주의 흐름 반대 교권주의와 반교권주의 갈등 빈곤에 빠진 이들을 돕고, 먹여야 한다(Feed the Poor)	기독민주당 등 정치참여(일부 국가), 복지국가 역할지지 일부 국가에서 반교권주의 반대	대륙유럽	
신교	칼뱅주의등1)	개인의 자립과 자율성, 정교분리 강조 자본주의 정신, 금욕주의, 직업윤리 빈민도 스스로 일하고 자립해야 한다 (Work for your own bread)	반국가사회주의 (anti-estatism) 국가개입 거부 사회정책 도입 지연	영미권
	루터교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일해야 한다(All should eat, All should work)	국가의 사회보장 주도 역할에 찬성, 복지국가에 협력적 입장	북유럽

주: 1) 자유주의 및 여타 개혁 교회 포함

자료: Weber(1904), Manow(2002), Kahl(2012), Manow와 Van Kersbergen(2012) 등에서 요약

3. 연구 방법

1) 주요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에 기반을 두어 종교에 따른 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인식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종교와 복지국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계적 선행모형을 활용하며, 국가 수준에서는 각 국가의 세속화 정도를, 개인 수준에서는 종교 유무 및 분파와 종교 활동 참여도를 투입하여 복지태도의 차이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이해적 차원에서 복지지위적 설명을 검증하기 위해, 종교여부와 종교성에 따라 복지국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설명에 근거하여 종교를 가진 사람은 종교를 통한 복지에 대한 모종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 주도적인 복지제공에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인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인 수준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리고 종교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종교를 통한 복지 추구를 더 선호하여 국가 주도적인 복지제공을 덜 지지할 것으로 본다. 또한 국가 수준에서도 세속화 정도에 따라 개인의 복지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세속화가 덜 진행된 국가일수록, 즉 국민의 평균적인 종교 활동 참여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국가 주도적인 복지 제공을 덜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종교 분파에 따른 가치규범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의 거시적인 논의에서 신교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강했던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에 신교 신자일수록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덜 지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구교인 가톨릭의 경우 산업화 및 근대화로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신교보다는 국가의 복지제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톨릭이 국가보다는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교분리에 관한 갈등이 첨예하였던 역사를 감안할 때, 구교 신자 역시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복지의 국가책임성에 대한 약한 지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교 중에서도 루터교회 중심으로 교세가 형성된 북유럽 국가들이 칼뱅주의 중심의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복지국가유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루터교회는 다른 신교 분파들에 비해 자유주의 성격이 약하였고, 국가 중심의 사회보장이 확대되는 데 있어 국가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신교 신자들의 복지의 국가책임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¹³⁾

13) 신교 내의 세부적인 종교분파에 대해서는 분석자료상의 한계라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ISSP 자료에서는 신교를 루터교와 칼뱅주의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조사된 종교 변수에는 세부적인 종파가 구분되어 있으나 그 구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이를 취합하여 만든 통합 종교 변수는 세부 종파들을 '신교'로 통합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국가 체제를 통해 대체로 북유럽(과 대륙유럽 국가들)의 신교는 루터교 중심이고, 영미권 국가의 신교가 칼뱅주의 중심임을 밝히고 간접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2) 분석 자료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국제인식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Role of Government IV(2016) 자료¹⁴⁾ 중에서 OECD 국가에 해당하는 12개 국가를 추출하여 활용한다. 이 중 서구 복지 국가들은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에 근거하여 자유주의·보수주의·사민주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자유주의 유형에는 3개 국가(호주, 영국, 미국), 보수주의 유형에는 3개 국가(프랑스, 독일, 벨기에), 사민주의 유형에는 4개 국가(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포함된다.¹⁵⁾ 본 연구는 주로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는 서구 10개국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지만, 한국과 일본 또한 동아시아 권역에 대한 탐색적 차원으로 추가하여 함께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국가 및 국가별 사례 수는 기초분석 결과에서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실시한다. 위계적 선형모형(HLM)은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의 변수가 함께 포함된 위계적 구조의 자료에서 각각의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층 분석 방법이다(Raudenbush & Bryk, 2002). 앞서 설명하였듯이 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제도 및 문화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의 인식이 결정되는 데 있어 국가 차원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 모형을 통해 국가 수준의 변수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단, 국가 수준의 경우 국가 사례 수가 많지 않은 점과 국가수준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국가변수를 하나씩 투입하였고, 이에 총 7개의 모델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의 변수는 전체평균중심화(grand-mean centering)를 하였으며, 개인수준 변수는 집단평균 중심화(group-mean centering)로 분석하였다. 단, 명목변수는 비중심화(uncentered)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 변수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각 개인이 생각하는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성 정도에 관한 문항을 활용한다. ISSP의 The Role of Government(2016)에서는 총 11개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책임이

14) ISSP(2016)자료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개인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자료로, 총 35개 국가에서 48,72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15) ISSP(2016) 자료에는 더 많은 OECD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서구 복지국가로 인식되어온 10개 국가만을 선별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는 복지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문화적 설명을 제공하는 연구들이 복지국가 유형론에 포함되는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Esping-Andersen, 1990; Kersbergen, 1995; Castles, 1998; Manow, 2004; Kahl, 2009).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11개의 분야 중 복지 영역으로 판단되는 6개 분야(아픈 사람을 위한 의료 제공, 노인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제공, 실업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제공, 빈부 간 소득격차 완화, 학생에게 재정 지원, 적절한 수준의 주거제공)에 대한 응답을 활용한다. 나머지 5개 분야(일자리 제공, 물가안정, 산업 성장 지원, 환경보호, 성평등 증진)는 직접적인 복지정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복지 분야에 대한 인식보다는 국가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주목하기 때문에, 각 문항별 점수의 합산 평균을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위계적 선형모형(HLM)의 방식에 맞추어 국가수준의 변수와 개인수준의 변수를 구분하여 투입한다. 먼저 국가수준의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복지국가이론에서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것으로 논의되어왔거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논의된 변수들, 즉 경제성장률, 실업률(이상 산업화이론), 노조조직률, 좌파정당 의석비중(이상 권력자원이론)이 통제변수의 성격으로 투입된다.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즉, 경제성장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조조직률이나 좌파정당 의석비중이 높아 노동계의 권력자원이 큰 사회에서도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이 높게 인식될 수 있다. 한편, 제도적 요인으로서 GDP대비 공공복지지출수준과 복지국가 유형(자유주의·보수주의·사민주의·동아시아)을 투입한다. 앞선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개인이 어떤 수준 및 유형의 복지국가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의 복지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국가의 복지책임을 크게 인식할 수 있다.

한편, 국가수준의 주요 독립변수로 국가의 '세속화 정도'를 투입한다. 이는 국가별 연구대상자들의 종교 활동 참여도의 평균을 최댓값(8점)에서 뺀 값으로 계산한다. 즉, '세속화 정도'의 점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종교 활동 참여도가 낮고, 해당 국가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속화 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해당 국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게 인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개인수준의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에서도 일단 기존 연구에서 개인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들 중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한다. 비계급적 균열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연령, 성별, 지역이 투입되며, 계급적 균열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고용지위, 직업부문이 투입된다. 연령이 높고, 여성일수록, 큰 규모의 지역에 거주할수록 복지의 필요(needs)가 크고, 국가 복지의 수혜자

(beneficiary)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복지 제공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자일수록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부담자(tax-payer)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복지 제공을 덜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수준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주요 독립변수는 ‘종교 유무 및 분파’와 ‘종교 활동 참여도’가 투입된다. ‘종교 유무 및 분파’는 종교 없음·구교(Catholic)·신교(Protestant)¹⁶⁾·기타 종교를 더미변수로 투입한다. 종교 활동 참여도는 종교의식(예배 등)에 참여하는 횟수를 1점부터 8점으로 구분하여 투입하며, 높은 점수일수록 종교적 열심이 강한, 종교성(religiosity)이 강한 개인으로 해석한다.¹⁷⁾

[표 3] 변수 목록

변수	변수명	측정	자료 출처	
종속 변수	국가 책임성	정부 책임성에 관한 6문항 점수 평균 1. 아픈 사람을 위한 의료 제공 2. 노인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제공 3. 실업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제공 4. 빈부 간 소득격차 완화 5.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 6. 적절한 수준의 주거 제공	ISSP (2016)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2011-2015년 평균값)	OECD NA (2018)
독립 변수	국가 변수	실업률	계절 조정된 실업률(2011-2015년 평균값)	OECD EL (2018)
		노조조직률	2011-2015년 평균값	OECD EL (2018)
		좌파정당 의석 비중	2011-2015년 평균값	CPDS(2018), 한국은 자체계산 ¹⁸⁾
		GDP대비 공공복지지출	2011-2015년 평균값	OECD SOCX (2018)
		복지국가 유형	자유주의(기준)(호주, 영국, 미국), 보수주의(프랑스, 독일, 벨기에), 사민주의(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동아시아(일본, 한국).	
		세속화정도	8- (국가 별 응답자들의 종교 활동 참여도 평균)	ISSP

16) 매우 다양한 기독교 분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적으로 ISSP(2016)의 구분에 따랐음을 밝힌다. 구교는 로마 가톨릭(Roman Catholic)을 의미하며, 신교에는 개신교, 성공회, 미국 성공회, 침례교, 루터교, 감리교, 오순절주의 이외에도 다양한 분파가 포함된다. 기타 종교에는 동방정교회, 유대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기타 기독교 분파, 기타 동양 종교 등이 포함된다.

17) 물론 개인의 종교성을 단순히 ‘종교 활동 참여도’로 측정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ISSP Role of Government data에서는 ISSP Religion data와 달리 개인의 종교성을 측정할만한 다른 문항이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힌다.

개인 변수		점수 높을수록 국가 전반의 종교성이 낮음을 의미	(2016)
	연령	연령 ¹⁹⁾	ISSP (2016)
	성별	성별 0=남성, 1=여성	
	사회 경제적 지위	자신의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1-10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지위를 높게 평가	
	교육수준	0-6점.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교육수준을 의미	
	고용지위	취업자(기준)/실업자/은퇴자/주부·학생/기타 비경제활동 동인구	
	직업부문	공공부문 종사여부 비경제활동인구(기준)/공공부문/사적부문	
	지역규모	거주 지역 규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 1=대도시, 2=중도시, 3=소도시, 4=마을 및 부락, 5= 농 가 등	
	종교 유무 및 분파	종교 없음(기준)/구교/신교/기타	
종교 활동 참여도	종교 활동(예배 등) 참여 횟수 1= '전혀 가지 않음', 2= '거의 가지 않음', 3= '일 년에 한 번', 4= '일 년에 몇 번', 5= '한 달에 한번', 6= '한 달에 두세 번', 7= '일주일에 한번', 8= '일주일에 2번 이상'		

주: OECD NA -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database).
 OECD EL -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database).
 OECD SOCX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4) 기초통계

(1) 독립변수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는 총 12개 국가 14,45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의 기초 통계는 [표 4]와 같다.²⁰⁾ 그 중 종교 관련 변수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 참여자 중 종교가 있는 사람은 62.8%,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중은 37.2%이다. 또한 전체 연구 참여자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5%는 구교 또는 신교 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 선진 국가에서 여전히 기독교 중심 종교문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교와 신교, 그리고 기타 종교 신자에 대한 비중은 각각 전체 연구 참여자 중 16%, 33%, 14%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종교 활동 참여도는 평균 2.75점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 중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종교 활동 참여도를 계산해보면 평균 3.38점이다. 2점이 '거의 가지

18) 한국은 CPDS(2017)에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계산하였다. 다만, 총선 이후에 유동적으로 바뀌는 의석수를 모두 고려할 수 없어, 2008년과 2012년도 총선 결과만을 반영하였음을 밝힌다.
 19) 연령은 기본적으로 연속변수로 투입된다. 단, 덴마크는 연령이 서열변수로 조사되어, 18-25세는 22세, 26-35세는 31세, 36-45세는 41세, 46-55세는 51세, 56-65세는 61세, 65세 이상은 70세로 투입된다.
 20) 위계적 선형모형(HLM) 분석을 위해 적어도 하나의 변수에서 결측(missing) 값을 가진 사례는 제외되었다.

없음', 3점이 '일 년에 한번', 4점이 '일 년에 몇 번' 종교예식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날 분석 국가들의 국민들은 종교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일 년에 한두 번 참석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표 4] 독립변수 기초통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개인차원 변수					
연령	14457	51.02	17.55	15	99
성별(남성=0)	14457	0.51	0.50	0.00	1.00
교육수준	14457	3.84	1.50	0.00	6.00
사회경제적 지위	14457	5.73	1.75	1.00	10.00
고용지위(취업자=0)					
실업자	14457	0.04	0.19	0.00	1.00
은퇴자	14457	0.23	0.42	0.00	1.00
주부 및 학생	14457	0.11	0.31	0.00	1.00
비경제활동인구					
섹터(비경제활동인구=0)					
공공부문	14457	0.29	0.46	0.00	1.00
사적부문	14457	0.65	0.48	0.00	1.00
지역규모	14457	2.70	1.20	1.00	5.00
종교여부(종교 없음=0)	14457	0.63	0.48	0.00	1.00
종교분파(종교 없음=0)					
가톨릭	14457	0.16	0.36	0.00	1.00
신교	14457	0.33	0.47	0.00	1.00
기타종교	14457	0.14	0.35	0.00	1.00
종교 활동 참여도	14457	2.75	1.96	1.00	8.00
국가차원 변수					
경제성장률	12	1.67	0.86	-0.02	3
실업률	12	6.44	2.06	3.36	9.99
공공복지지출(% GDP)	12	23.61	6.21	9.24	31.32
노조조직률	12	34.83	24.99	8.	69.4
좌파정당 의석 비중	12	28.83	25.6	0	72.6
세속화 정도	12	5.23	0.55	3.84	5.76

한편 국가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은 경제성장률과는 높은 부적 관계, 실업률과 세속화 정도와는 유의미하고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장률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을수록, 세속화 정도가 높을수록 GDP 대

비 공공복지지출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5] 국가변수 상관관계

	경제성장률	실업률	세속화정도	공공복지지출	노조조직률	좌파정당의석비중
경제성장률	1	-.470	-.291	-.800**	-.450	-.295
실업률	-.470	1	.369	.724**	.250	.410
세속화정도	-.291	.369	1	.608*	.537	.572
공공복지지출	-.800**	.724**	.608*	1	.534	.522
노조조직률	-.450	.250	.537	.534	1	.320
좌파정당의석비중	-.295	.410	.572	.522	.320	1

(2) 국가별 종교 특성

[표 6]은 1945년과 2016년의 각 국가별 종교 분포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지난 50여 년간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45년 당시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중이 5% 미만이었으나, 오늘날에는 20%~60% 가량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국가 체제별 종교 분포의 특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유주의는 프로테스탄트의 신교 중심, 보수주의는 구교 중심, 사민주의는 루터교의 신교 중심이라는 종교 분포의 특색은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호주에서는 개신교의 비중이 크게 줄고, 기타종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여전히 신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영국은 1945년에 비해 신교 신자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한편,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종교 분포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신교 신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보수주의 국가들의 경우 프랑스와 벨기에에는 1945년에 비해 구교 신자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 내에서는 구교 신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민주의 유형의 국가들은 신교 중에서도 루터교 신자 비중이 오늘날까지도 70-80%를 차지하고 있다. 1945년 당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루터교 신자였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 오늘날까지도 루터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있다.²¹⁾

21) 스웨덴의 경우 2000년, 노르웨이는 2017년에 국교 철폐하였다.

[표 6] 국가별 종교 분포: 2016년 (1945년)

국가		종교없음(%)	종교있음(%)	가톨릭	개신교	기타
자유주의	호주	40.1(3)	59.9(97)	22.0(23)	4.3(53)	33.5(21)
	영국	39.0(4)	61.0(96)	9.1(7)	32.4(81)	19.5(8)
	미국	20.6(16)	79.4(84)	23.4(28)	48.4(49)	7.5(7)
보수주의	프랑스	44.1(5)	55.9(95)	50.0(92)	1.7(2)	4.3(1)
	독일	42.3(2)	57.7(98)	24.3(45)	28.6(49)	4.8(4)
	벨기에	42.8(2)	57.2(98)	29.4(96)	1.2(0)	26.6(2)
사민주의	덴마크	18.4(0)	81.6(100)	0.6(0)	79.4(98)	1.6(2)
	핀란드	26.0(2)	74.0(98)	0.3(0)	69.2(96)	4.5(2)
	노르웨이	23.7(1)	76.3(99)	1.8(0)	70.6(99)	4.0(0)
	스웨덴	28.8(3)	71.2(97)	0.6(0)	68.8(96)	1.8(1)
동아시아	일본	64.1(1)	35.9(99)	0.0(0)	0.0(0)	35.9(99)
	한국	45.3(0)	54.7(100)	9.4(2)	21.4(4)	23.9(94)

자료: ISSP (2016)자료에서 분석, 1945년 자료는 world religion dataset(2010)

그러나 이러한 종교 분포와는 달리 이 국가 사람들의 종교 활동 참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7]에서는 국가 간 종교성(religiosity)의 정도, 혹은 세속화(Secularization)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 '종교성2'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종교 활동 참여도 평균값을 보여주는 데, 사민주의 국가들의 경우 모두 3점 이하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교회에 일 년에 한 번도 채 가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 인 것으로 확인된다. 즉,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들 대부분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 활동은 극히 미미한 것이다. 주커만(Zuckerman, 2008)은 스칸디나비아 사람들과 인터뷰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가진 믿음이 예수나 성경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가난한 자와 병자를 돌보고,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도덕적 차원의 믿음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 사회 전반적인 세속화 정도를 비교해보면 보수주의와 사민주의에서 세속화의 정도가 높은 반면,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는 미국만이 여전히 높은 종교 활동 참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종교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종교성도 4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종교 활동 참여도가 비교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국가별 종교성과 세속화 정도

국가		종교성1	종교성2	세속화 정도
자유주의	호주	2.69	3.51	5.31
	영국	2.51	3.34	5.49
	미국	4.16	4.72	3.84
보수주의	프랑스	2.38	3.11	5.62
	독일	2.56	3.25	5.44
	벨기에	2.42	3.07	5.58
사민주의	덴마크	2.40	2.61	5.60
	핀란드	2.59	2.87	5.41
	노르웨이	2.69	3.00	5.31
	스웨덴	2.24	2.51	5.76
동아시아	일본	3.29	3.91	4.71
	한국	3.26	4.91	4.74

주: 종교성 1은 종교유무에 상관없이 전체 연구 참여자 대상 국가별 종교 활동 참여도의 평균값, 종교성 2는 종교를 가진 연구 참여자 대상 국가별 종교 활동 참여도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세속화 정도는 {8-(종교성1)}로 계산되었다.

4. 분석 결과

1) 모형 적합도

위계적 선형모형(HLM)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기초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자료가 위계적 선형모형으로 분석하기에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종속 변수에 국가(집단)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채 종속 변수의 변량을 살펴보는 ‘무조건 모형’을 수행하였으며, [표 8]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위계적 선형모형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는 주로 ‘집단 내 상관(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과 ‘설계효과(DEFf)’가 사용된다. 전자는 전체 변량 중에서 국가 간 변량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본 자료의 ICC값은 0.087²²⁾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차원의 특성이 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성의 약 9% 가량을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CC 값이 어느 정도 되어야 다층분석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0.05 이상이면 자료가 위계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Hox, 2010). 한편 ‘설계효과(DEFf)’는 오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본크기를 고려하는 것으로, 본 분석 자료의 설

$$22) ICC = \frac{V_{between}}{V_{between} + V_{within}} = \frac{0.027}{0.027 + 0.284} = 0.087$$

계효과는 105.14²³⁾로 나타났다. 설계효과는 보통 그 값이 2이상이면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Muthen & Satorra 1995; Peugh, 2010: 91에서 재인용), 본 연구 자료는 이 임계치를 크게 넘어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표 8] 무조건모형의 변량

무작위효과		분산	자유도	X ²	P값
절편	U0	0.027	11	1328.02	0.00
level 1	R	0.284			

2) 종교와 복지태도 간의 관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종교는 개인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모두 국가 주도적 복지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균열을 가져오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우선 개인차원 변수 중에 종교와 관련된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복지태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톨릭과 신교 신자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신교(Protestantism)는 개인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강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큰 정부에 대한 지지가 낮다고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이 개인 차원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교(Catholic)의 경우, 거시적인 측면에서 신교에 비해 보수적인 성격을 띠며 자본주의 및 근대화 확산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단위에서의 분석결과, 가톨릭 신자의 경우에도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국가 주도적 복지에 대한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교 신자에 비해서는 국가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작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국가복지를 지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톨릭의 교권주의적 성격으로 국가보다는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는 태도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개인 차원에서 신교이든 구교이든 종교가 있는 경우, 자기이해에 기반하여 종교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국가복지에 대한 지지가 달라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즉 종교 활동 참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하는데, 종교생활은 개인의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서 그들이 경험하는 생활위험으로부터 완

23) $DEFF = 1 + ICC(N - 1)$. (단, N 은 집단평균사례수)

층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국가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인식한다(Gerxhani & Koster, 2012; Scheve & Stasavage, 2005)는 설명들이 그것이다. 이는 복지수혜자로서의 복지지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차원의 통제변수의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비계급적 균열에 따른 자기이해(self-interest) 설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복지태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가 복지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국가 발달을 통해 돌봄의 사회화, 여성고용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받게 되어 여성이 남성보다 받는 혜택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국가복지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국가 복지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지 제공하는 것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고용지위와 관련해서는, 취업자에 비해 실업자, 비경활, 은퇴자일수록 복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복지태도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적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국가 주도적인 복지제공을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복지의 국가 책임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복지태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연령과 종교와의 높은 관련성, 즉 고령자일수록 종교를 가지고 종교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규모의 영향력의 경우, 큰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복지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일수록 사회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사회와 비공식부문을 통한 복지자원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더 강하게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차원의 변수의 경우 작은 국가사태수와 변수 간 높은 상관성으로 인해 하나씩만 투입할 수 있었다. 복지국가 유형의 경우, 자유주의 유형(미국, 호주, 영국)에 비해 보수주의 유형(프랑스, 독일, 벨기에)은 복지인식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사민주의 유형(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은 더 높은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성 인식을 보였고, 동아시아 유형(한국, 일본)은 더 낮은 국가책임성 인식을 나타내었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복지국가 유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와 종교 등의 다차원적인 제도적 복합체(Esping-Andersen, 1990)이기도 하지만,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지니기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Castles, 1998). 즉 보수주의 유형은 구교(가톨릭)의 전통적인 가치와 제도 아래 있었고, 자유주의 유형은 신교 중에서도 칼뱅주의의 영향을 받는 한편, 사민주의 유형의 국가들은 신교 중에서 루터교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았으며, 동아시아 유형은 불교와 유교 등

의 종교에 기반을 둔 문화가 형성된 국가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 유형에 비해 시민주의 유형이 더 높은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성 인식을 보인 것은 정치경제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 신교 중에서도 루터교와 칼뱅주의 간에 국가의 역할과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Manow, 2002; Kahl, 2009)을 한편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국가의 세속화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개인의 국가 복지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지원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복지제공주체로서 종교가 담당해온 기능적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복지제공자로서의 지위). 종교는 종교기반의 민간복지 부문을 통해 제 3섹터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복지국가에서 전통적인 복지공급주체로 기능했으며, 국가 주도적 복지가 발전한 나라들에서 종교기반의 민간복지부문과 공공부문과의 모종의 경쟁적 역할이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실제로 선행연구들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부나 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종교성이 강한 경우에는 민간 복지의 중요성을 더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의 기능주의적 차원을 적용해보면, 복지에 있어서 종교와 국가 간에 경쟁적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속화의 진행으로 종교의 역할이 줄어든 사회일수록 종교가 담당했던 복지의 역할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복지수혜자의 지위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개인의 복지가 종교 공동체라는 사적 보호망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개인의 국가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세속화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국가복지의 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개인 차원 변수에서 종교와 복지 간에 부적인 관계가 나타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좌파정당 의석 비중이 높을수록 국가복지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자원론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력자원을 확보하는 정도에 따라 경제적 권력자원을 분배시키는 복지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리를 복지태도에 적용해보면, 좌파정당 의석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노동자의 권력자원이 커서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복지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경제성장률, 실업률,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수준, 노조조직률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ICC 값이 0.05~0.09로 여전히 전체 변량의 4~9%가량을 국가차원의 변수들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층분석을 통해 국가 수준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개인 수준 변수들의 설명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9] 종교분파 별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 변수		모델3-1		모델3-2		모델3-3		모델3-4		모델3-5		모델3-6		모델3-7		
		b	t	b	t	b	t	b	t	b	t	b	t	b	t	
개인 수준 변수	Intercept	3.05	45.30**	3.12	58.08**	3.12	9.85**	3.12	63.76**	3.12	60.76**	3.12	61.50**	3.12	64.55**	
	연령	0.00	-0.03	0.00	-0.04	0.00	-0.03	0.00	-0.03	0.00	-0.03	0.00	-0.04	0.00	-0.03	
	성별 (남성=0)	0.08	8.81**	0.08	8.79**	0.08	8.79**	0.08	8.90**	0.08	8.79**	0.08	8.80**	0.08	8.80**	
	교육수준	-0.02	-6.21**	-0.02	-6.22**	-0.02	-6.22**	-0.02	-6.22**	-0.02	-6.22**	-0.02	-6.22**	-0.02	-6.21**	
	사회경제적 지위	-0.03	-12.49**	-0.03	-12.49**	-0.03	12.49**	-0.03	-12.49**	-0.03	-12.49**	-0.03	-12.49**	-0.03	-12.49**	
	고용지위 (취업자=0)	실업자	0.20	8.29**	0.20	8.29**	0.20	8.29**	0.20	8.29**	0.20	8.29**	0.20	8.29**	0.20	8.29**
		은퇴자	0.08	6.85**	0.08	6.86**	0.08	6.85**	0.08	6.85**	0.08	6.85**	0.08	6.87**	0.08	6.87**
		주부·학생	0.04	2.75**	0.04	2.74**	0.04	2.74**	0.04	2.74**	0.04	2.74**	0.04	2.74**	0.04	2.74**
	직업부문(비경제 활동인구=0)	기타비경활	0.13	5.78**	0.12	5.75**	0.12	5.75**	0.12	5.75**	0.12	5.76**	0.12	5.75**	0.12	5.75**
		공공부문	0.02	0.81	0.02	0.84	0.02	0.84	0.02	0.84	0.02	0.83	0.02	0.84	0.02	0.83
	지역규모	-0.05	-2.46*	-0.05	-2.44*	-0.05	-2.44*	-0.05	-2.44*	-0.05	-2.44*	-0.05	-2.44*	-0.05	-2.44*	
	종교분파 (종교없음=0)	가톨릭	-0.04	-2.47*	-0.04	-2.44*	-0.04	-2.47*	-0.04	-2.43*	-0.04	-2.45*	-0.04	-2.43*	-0.04	-2.46*
		신교	-0.04	-3.30**	-0.04	-3.23**	-0.04	-3.23**	-0.04	-3.21**	-0.04	-3.23**	-0.04	-3.28**	-0.04	-3.23**
		기타종교	0.01	0.71	0.01	0.68	0.01	0.68	0.01	0.68	0.01	0.69	0.01	0.68	0.01	0.68
종교 활동 참여도	-0.01	-2.13*	-0.01	-2.15*	-0.01	-2.14*	-0.01	-2.15*	-0.01	-2.14*	-0.01	-2.14*	-0.01	-2.14*		
국가 수준 변수	복지국가유형 (자유주의=0)	보수주의	0.15	1.66												
		사민주의	0.17	2.02†												
		동아시아	-0.19	-1.94†												
	경제성장률			-0.06	-0.92											
	실업률					0.03	1.30									
	세속화 정도							0.16	1.94†							
	GDP대비 공공복지지출									0.01	1.46					
노조조직률											0.00	1.59				
좌파정당 의석 비중													0.00	2.05†		
Deviance		22342.2		22347.9		22348.9		22344.7		22350.7		22353.2		22349.2		
ICC		0.041		0.092		0.086		0.074		0.083		0.081		0.053		

† : p<.1, * : p<.05, ** : p<.01.

5. 결론

이 연구는 그동안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에 관한 주류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종교’에 주목하였다. 특히 종교가 개인의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발견은 종교가 복지 인식, 특히 국가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균열을 가져온다는 이론적 가설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물론 복지국가의 발전과 같은 시기에 종교의 세속화가 진전되어왔고, 국가 복지가 발전한 서구 유럽 국가들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감소해온 것이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오늘날에도 종교는 개인의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한 오늘날에도 종교는 여전히 개인의 가치관 또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안정적인 변수임을 의미한다. 종교가 여전히 각 국가 내에서 복지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상당히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두 번째 핵심적 발견은, 종교와 복지국가의 관계는 종교분파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복지를 누가 주로 제공하느냐라는 복지제공주체의 측면이나 복지수급자로서의 복지지위를 어디에서 향유하는가의 측면을 통해 모종의 상충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종교기관에서 국가로의 역할 이전, 즉 복지 제공주체의 세속화라는 공통된 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결과에서도 한 국가의 종교세속화 정도가 클수록 국가의 복지책임성이 강조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시적 차원에서도 개인들의 종교가 무교보다는 신교나 구교일수록, 개인의 종교 활동이 활발할수록 혹은 종교성이 높을수록 국가복지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요컨대, 종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사회와 개인일수록, 국가의 복지책임성에 대한 낮은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신교와 구교의 가치가 근원적으로 국가중심주의와 충돌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복지에 종교와 종교 공동체가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복지국가체제 혹은 국가 단위에서 종교의 역할을 논의한 경향이 있는데, 기존 연구의 발견점들이 본 연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종교가 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이 종교분파 간에 다르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특히 가톨릭 중심국가, 신교 중에서 루터주의 중심 국가, 칼뱅주의적 신교 중심 국가 간에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의 차이와 균열이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루터주의 국가는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가장 강하고, 칼뱅주의 신교는 국가의 복지책임성에 대해 가장 낮은 지지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자유주의 유형에 비해 사민주의 유형이 더 높은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성 인식을 보임으로써 신교 중에서도 루터교와 칼뱅주의 간에

국가의 역할과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이론적 설명에 대해 적어도 간접적인 재확인 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종교와 복지인식간의 관계는 자기이해적 차원과 가치규범적 차원에서 영향력이 모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즉 종교의 영향은 종교 분파 간의 가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복지가 종교 공동체라는 사적 보호망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 국가의 세속화 정도 등에서 파생되는 복지지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크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으나 향후 연구를 위해 중요한 사안 몇 가지가 남아있다. 각 국가의 종교 분포 및 세속화 정도에 따라 개인의 종교와 복지태도 간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 즉 상호작용효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국가별로 종교가 복지국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은 미국과 함께 대표적인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 중 하나이지만, 두 국가의 종교의 세속화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영국과 미국에서 신교 신자 여부에 따른 개인의 복지태도의 차이나, 신교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는 매우 상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탐색적 차원에서 함께 분석을 시도한 동아시아 국가(한국, 일본)의 경우에는 종교의 영향력이 서구의 국가들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기독교, 가톨릭, 불교 등 종교 다원주의적 사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교의 사회에 대한 영향의 보편성과 분파 간 상이성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흥미롭고 중요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19세기 말, 마르크스가 유물론적 사관을 설파한 이래, 하부의 경제구조가 상부구조인 철학과 정치, 가치체계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지배적 담론이 되어왔다. 이를 통해 경제체제의 중요성이 사회과학의 전면에 부각되어 온 한편, 상부구조의 역할에 다시 주목하는 연구경향 또한 최근에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유발 하라리는 인류의 문명사를 다룬 화제작 '사피엔스'를 통해 종교가 인류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지대했는가를 역설하였다. 그리하여 경제보다 중요한 종교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신념체계가 가진 힘을 강조한 바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 향후 급변하는 복지국가의 제반 여건 속에서 종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개인과 사회의 신념을 상당 부분 규정하고, 다양한 균열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종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거시적 방향과 개인의 삶의 방식을 제약하는 중요한 기능을 여전히 담당해나갈 것이다. 복지국가가 문화에 기반한 경로의존적 제도화의 20세기형 성과물이라면, 다양한 이유에서 복지국가의 존립기반이 의심받는 21세기야말로 종교의 의미에 관한 사회정책학적 관심이 필요한 시대일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철희, 허영혜, 최영훈(2013). 종교와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4), 341-365.
- 김덕영 (역) (201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Weber, Marx (1904). 서울: 길.
- 김사현(2010).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복지제도의 보편성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효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접근법. *사회복지연구*, 41(3), 213-239.
- 김승욱 (역). (2008). 신 없는 사회. Zuckerman, Phil. (2008). 마음산책.
- 류대영(2002). 세속화 이론과 미국 종교사. *종교와 문화*, 8, 21-41.
- 백정미, 주은선, 김은지(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37, 319-344.
- 배은총(2014). 종교와 복지국가의 관계 연구-개인의 종교적 특성과 복지태도 간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상훈(2000). 복지정치의 사회적 균열구조에 관한 연구-계급론의 한계와 새로운 분석틀. *한국사회복지학*, 43, 193-221.
- _____ (2002). 계급정치의 희석과 복지국가의 대안적 방어기제: 복지지위모형에 대한 거시적 증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9, 159-181.
- _____ (2009).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16(1), 163-192.
- 이상은, 김희찬(2017). 종교, 복지국가, 그리고 복지인식. *비판사회정책*, 5(4), 373-410.
- 이재열, 강상진, 방하남, 이명진, 박경숙, 은기수(2013).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원리와 실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남경(2013). 사회복지의 문화적 토대, 복지태도, 그리고 문화적 문맥 :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있어 세 가지 문화적 접근의 현황과 과제. *비판사회정책*, 39, 235-273.
- Ahn, S. H. (2000). Pro-welfare politics: a model for chang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Doctoral dissertation,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 Ahn, S. H., & Kim, S. W. (2015). Social investment, social service an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welfare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4(2), 109-119.
- Alber, J. (1995). A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social servic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5(2), 131-149.
- Anders, H. J. & Heien, T.(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4), 337-356.
- Arts, W. & Gelissen, J.(2001). Welfare states, solidarity and justice principles: Does the type really matter?. *Acta Sociologica* 44(4), 283-299.
- Arts, W., Halman, L. & Van Oorschot, W. (2003). The Welfare State: Villain or Hero of the Piece?. In Arts, W., Hagenaars, J., & Halman, L. (eds). *The Cultural Diversity of European Unity* (pp.275-308). Boston: Brill.
- Bean, C. & Papadakis, E. (1998). A comparison of mass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in different institutional regimes, 1985-1990.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0(3), 211-236.

- Bekkers, R. & Wiepking, P. (2006). To give or not to give, that is the question: How methodology is destiny in Dutch giving dat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5(3). 533-540.
- Bonoli, G. (2000). Public attitudes to social protection and political economy traditions in Western Europe. *European Societies*. 2(4). 431-452.
- Brooks, A. C. (2005). Does Social Capital Make You Generous?. *Social Science Quarterly*. 86. 1-15.
- Carriero, R., Filandri, M. & Molteni, F. (2017). Religion, welfare regimes and attitudes toward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citizens' welfare: A European comparative analysis. 4 769-802. DOI: 10.1423/88794
- Castles, F. G. (1994). On religion and public policy: Does Catholicism make a differenc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5(1). 19-40.
- _____. (1995). Welfare state development in South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18(2). 291-313.
- _____. (1998). *Comparative public policy: Patterns of post-war transformation*. Edward Elgar Publishing.
- De La O, A. L. & Rodden, J. A. (2008). Does religion distract the poor? Income and issue voting around the world.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4-5). 437-476.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 Finseraas, H. (2008). Immigration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European survey data.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6(4). 407-431.
- Flora, P., Kuhnle, S. & Urwin, D.(Eds.). (1999). *State Formation Nation-Building, and Mass Politics in Europe: The Theory of Stein Rokkan*, Oxford University Press.
- Gërxfhani, K. & Koster, F. (2012). I am not alone': Understanding public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International Sociology*. 27(6). 768-787.
- Häusermann, S. & Schwander, H. (2009). Identifying outsiders across countri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atterns of dualisation. REC-WP Working Papers on the Reconciliation of Work and Welfare in Europe. (09-2009).
- Hodgkinson, V. (1990). The future of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The inseparable link between religious community and individual generosity. In Wuthnow, R., & Hodgkinson, V. A. (eds). *Faith and philanthropy in America: Exploring the role of religion in America's voluntary sector* (pp. 284-312). San Francisco, CA, US: Jossey-Bass.
- Jæger, M. M. (2006). Welfare regimes and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on: The regime hypothesis revisited.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2(2). 157-170.
- Jones, C. (1990). Hong Kong, Singapore, South Korea and Taiwan: Oikonomic Welfare States. *Government and Opposition*. 25(4). 446-462.
- Kahl, S. (2009). Religious doctrines and poor relief: a different causal pathway. Religion, class coalitions, and welfare states. 267-2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tschelt, H., & Rehm, P. (2006). New social risk and political preferences. In Armingeon, K., & Bonoli, G. (Eds.).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adapting post-war social policies to new social risks*(pp.52-82). Routledge.
- Korpi, W.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Korpi, W. &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661-687.
- Larsen, C. A. (2008). The institutional logic of welfare attitudes how welfare regimes influence public suppor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2), 145-168.
- Manow, P. (2004).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Esping-Andersen's Regime Typology and the Religious Roots of the Western Welfare State. MPIfG working paper 04/3.
- Manow, P. & Van Kersbergen, K. (2009). Religion and the western welfare state: the theoretical context. In Van Kersbergen, K., & Manow, P. (Eds.). *Religion, class coalitions, and welfare states*(pp.1-3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u, S. (2003). *The moral economy of welfare states: Britain and Germany compared*. London: Routledge.
- Muthen, B. O. & Satorra, A. (1995). Complex sample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ociological methodology*, 25(1), 267-316.
- Norris, P. & Inglehart, R. (2004). *Sacred and secular: Religion and politics worldw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sch, D. (2003). Labour market trends and the Goldthorpe class schema: a conceptual reassessment. *Revue suisse de sociologie*, 29(2), 241-262.
- Oesch, D. (2006). Coming to grips with a changing class structure: An analysis of employment stratification in Britain, Germany, Sweden and Switzerland. *International Sociology*, 21(2), 263-288.
- Opielka, M. (2008). Christian foundations of the welfare state: Strong cultural valu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van Oorschot, W., Opielka, M. & Pfau-Effinger, B. (Eds.). (2008). *Culture and welfare state: Values and social policy in comparative perspective*(89-114). Edward Elgar Publishing.
- Papadakis, E. & Bean, C. (1993). Popular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a comparison between institutional regimes. *Journal of Public Policy*, 13(3), 227-254.
- Peugh, J. L. (2010). A practical guide to multilevel modeling.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8(1), 85-112.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Vol. 1). Sage.
- Scheve, K. & Stasavage, D. (2006). Religion and preferences for social insurance.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3), 255-286
- Schmidt, M. G. (1980). CDU und SPD an der Regierung. Ein Vergleich ihrer Politik in den Ländern. Frankfurt and New York: Campus.
- Schmidt, M. G. (1982). *Wohlfahrtsstaatliche Politik unter bürgerlichen und "sozialdemokratischen Regierungen*. Frankfurt and New York: Campus.
- Skocpol, T. (1992). *Protecting Soldiers and Mothers: The political origins of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gmueller, D. (2011). Apples and oranges? The problem of equivalence in comparative research. *Political Analysis*, 19(4), 471-487.

- Svallfors, S. (1997).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3). 283-304.
- Thewissen, S., & Rueda, D. (2019). Automation and the Welfare State: Technological Change as a Determinant of Redistribution Preferenc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52(2). 171-208.
- VanHeuvelen, T. (2014). The Religious Context of Welfare Attitud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3(2). 268-295 <https://doi.org/10.1111/jssr.12118>
- Van Kersbergen, K. (1995). *Social Capitalism: A study of Christian democracy and the welfare state*. Routledge.
- Van Oorschot, W. (2000). Who should get what, and why? On deservingness criteria and the conditionality of solidarity among the public. *Policy & Politics*. 28(1). 33-48.
- Van Oorschot, W. (2006). Making the difference in social Europe: deservingness perceptions among citizens of European welfare stat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February. 16(1). 23-42.
- Van Oorschot, W., Opielka, M. and Pfau-Effinger, B. (2008). *Culture and welfare state: Values and social poli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ward Elgar Publishing
- Wilensky, H. L. (1981). Leftism, Catholicism, and Democratic Corporatism: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Recent Welfare State Development. In Peter Flora and Arnold J. Heidenheimer (eds).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Europe and America*(pp.345-382).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Books.
- Wilhelm M. O., Rooney P. M. & Tempel E. R. (2007). Changes in Religious Giving Reflect Changes in Involvement: Age and Cohort Effects in Religious Giving, Secular Giving, and Attendan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6. 217-32.
- Wuthnow, R. (1991). *Acts of Compassion: Caring for Others and Helping Ourselv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bstract ▶

Religion and the welfare state: How religion affects welfare attitudes?

Eun Chong Bae*, Soo Wan Kim** & Sang-Hoon Ah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religion on welfare attitudes of individual in welfare states. While the importance of religion tended to be relatively ignored in current welfare state research, we investigate how religion affects welfare states in both theoretical and analytic contexts. We first suggest two theoretical frameworks for the effects of religion on welfare attitudes: self-interest perspective (welfare status) and value perspective. Then we analyze the effect of religion on welfare attitudes with the multi-level analysis using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2016) dat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ligion has been proved to be a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public attitudes toward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welfare. Second, the more dependent on religion, the less supportive for the state role for welfare. It shows that an individual has conflict on interest between religion and the state as a welfare provider, taxpayer, and welfare recipient in perspective of welfare status. It also implies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tate in the functional context. Thirds, while the values of the protestant and Catholic tends to conflict against state-centralism, the effects of welfare state regimes imply that Lutheranism and Calvinism among Protestantism may have different values on capitalism and the role of the welfare state.

Key words: religion, welfare attitude, welfare state, welfare status, multi-level analysis

◆ 2019. 1. 31. 접수 / 2019. 3. 25. 1차수정 / 2019. 4. 2. 게재확정

* First Author, PhD Candidat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favor1216@snu.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soowankim@hanmail.net)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onco@snu.ac.kr)